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 개문발차

국조특위, 전체회의서
일정 등 의결... 국힘 불참
내일부터 현장 방문
대통령실 한오섭 실장 등
기관보고 관련 증인 특정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여당의 불참 하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했다. 다만 청문회에 부를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며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힘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활동기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21일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같은 날 27일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과 29일 서울시장 등 10개 기관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청은 양일에 모두 출석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등 8명을 증인으로 특정해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다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에 대해 우 의원은 "청문회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

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기관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교홍 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 협의 계속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참사가 있는 지 벌써 49세가 지나갔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국민 유가족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 본조사 들어간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 가진 건 알겠는데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유엔기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 처리가 안 되면 그 어떤 논의도 안 된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증인 채택도 24일

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다. 절반 이상 흘러갔다"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희근 경찰청장 동서 하에 경찰 조직 인사 제도 개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국정조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은 중단해야 하는 것이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지 않다. 그런데 보란 듯이 오만하게 경찰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답답하다"면서도 "오늘은 안건 처리 집중 위해 말을 아끼겠다. 이 장관 출석하면 여러가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승적·대통합 차원 결정”

민주 지도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 승인
최고위원들 간 대립 속 이재명 대표 의견 수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복당을 대통합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국정원장 복당이 허용됐다.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최고위에서 복당 논의가 5번째까지 이어졌다. 찬반이 팽팽해 결정을 못했는데 오늘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국정원장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류한 바 있다.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어 논의를 거친 뒤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지난 최고위 후 입장이었다.

박 전 국정원장 복당과 관련한 관련 당원 당규를 엄격히 미련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대선 때 폭넓게 문호 개방했던 것을 상기하란 견해가 대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경래 최고위원은 박 전 국정원장 복당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경로를 거쳐 박 전 국정원장 행보를 쫓으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국정원장 복당에 대한 최고위원 찬반 의견은 동수였다고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대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국정원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최고위원들이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복당 결론 후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복당에 출공 반대했지만 이 대표의 대통합 대승적 결단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대표 결단과 제안에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 또한 "지난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한 많은 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며 "민주당 단일 대오 형성에 박 전 국정원장도 가이한 단 부분이 있어 당대표가 결정하고 최고위원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전 국정원장 복당 관련 후속 절차에 대해서 "오늘 (복당 결정)이 됐으니 행정적 절차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선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민 의원 복당 여부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한 인사다. 이후 당내 일각선 그의 복당 논의 주장이 있었으며, 정 최고위원도 박 전 국정원장보다 민 의원 복당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취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되나

민주 윤준병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임제, 개정법 시행 후 최초 선출 회장부터 적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 관련 제도를 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하



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발안의 기본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미래 교육체제 대전환 위한 과제 모색’

도의회 미래세대 위한 정책발전연구회, 토론회 열어
유보통합과 관련 “융통성 있는 운영 필요” 목소리

전북도의회 연구단체 '전라북도 미래세대 위한 정책발전연구회'가 주최한 미래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가 19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박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정수 연구책임의원, 주현화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서영미 호원대학교 교수, 온정이 전북사람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상근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유보통합'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희 대표의원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역할"이라며 "유보통합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것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수 연구책임의원은 "유보통합은 늘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걸림

돌이 있었다"며 "영유아와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기존 어린이집 업무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화 학교교육과 과장은 "관할 부처 통합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0-5세 모두를 위한 유보통합이어야 한다"면서 "재정 확보와 유보의 질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이 회장은 "무엇보다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동일한 정책 내용을 두고 관할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돼 발생하는 생애 출발부터의 성장환경 격차 등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영미 교수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이 초등 고학년 이상 연령의 아동과 확연히 다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유보과



전북도의회 연구단체 '전라북도 미래세대 위한 정책발전연구회'가 주최한 미래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가 19일 성황리에 마쳤다.

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영유아 유보담당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과장은 "부모가 자녀와 가정의 요구를 반영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보육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특히, 기관 운영자의 철학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논의되고 연구됐으나 유보통합이 이뤄

지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타개할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연구단체에서 대정부 상대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방청객들은 유보통합에 대해 유보의 질 향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힘, '당원투표 100%' 개정 착수... 일부 당원주자들 '골목대장 뽑나' 반발

당 지도부,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관련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자 일부 당원주자와 비윤계 인사들은 '골목대장 뽑나'며 물 개정의 정당성 부족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원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낮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보

부 인터뷰에서 "당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민 앞에서 정당당권 모습을 보여야 총선에 도움 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원 투표 100%"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선 승리에 도움 되지 않음 같아서 우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좀 더 국민과 당원 앞에 당당하게 나섰으면 좋겠다"며 "이번에야말로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춰서 총선에 승리하는 중책을 맡은 당대표 선거"라고 설명했다.

비윤계 당원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허은아·김용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비대위의 물 개정이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에서 물 개정이 논의된 시점부터 "유승민 죽이기"라고 반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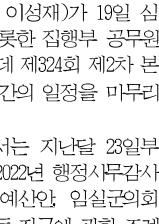
임실군의회, 내년 예산 5261억 확정

올 한해 의사일정 마무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가 19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예산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2023년 예산안, 임실군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2개 부서 및 3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군정 업무의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사무의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시정 1건, 처리 27건, 건의 73건 등 총 101건의 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요구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적체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총 5,261억 원으로 2023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했다.

또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임실군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솟는 물가와 지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10만원 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성재 의장은 폐회에서 임실군민에게 제언의 의의와 함께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며 "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